

野 '예산·탄핵·법안' 총동원 초강력 공세

박찬대 “정부안, 애초부터 비정상적 예산” 법안 통과-거부권 행사-재의 표결 약속한 연말 정국 주도권 굳히겠다 판단 작용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예산·탄핵·법안' 카드를 총동원하며 거침없는 대어(對與) 초강력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 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며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별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필요성이 소명된 특별비, 필요성이 입증된 특별비는 감액하지 않았다. 증빙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씌지만만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 화해,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관

련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협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야당 단독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를 일단 모면했지만, 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비서실 등이 특별비 사용 내용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 삭감 기조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은 4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 당사자들의 직무 정지로 이어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 전망이다.

야당 추진 법안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뒤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의 표결에서 폐기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오늘 10일 재의 표결을 앞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의 표결에서 또 폐기되더라도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태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건도 최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영역이 아닌 ‘사각지대’에 대한 공략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야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진행 방침을 밝히면서 야당도 결국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추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5일 위정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 우려를 일부 해소한 틈을 활용해 연말 정국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수 기자

대통령실 “2026학년도 증원 조정 논의 가능”

장상운 “의료계 강성 주장만 매몰 말고 합리적 의견 나눠야”

대통령실 장상운 사회수석비서관은 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번에는 변화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정부는 계속 의료계와 대화를 열심히 시도하고 있고 의료계 내에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의료단체의 이탈로 여야의 정협이체가 중단된 데 대해 “자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 논의의 진전이 어려워 풀타임(냉각기)을 가져보자는 것”이라며 “언제든 테이블에 앉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이체에서 상당히 소통이 이뤄졌다”며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총론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거나 서로 이해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의정 갈등의 핵심 사유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26학년도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근거를 갖춰 대안을 제시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으로 2025학년도 입시는 올해 5월 말 대학별 모집 공고를 낼 때 이미 틀이 정해졌고 그에 맞춰 학생들이 준비해 왔다”며 “그런데 예고했던 것에서 안 뽑거나 취소하면 (학생들의) 기회 박탈이므로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장 수석은 “고등교육 법령에 따라 정원은 2년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 4월 말에 2천명 증원을 반영한 5천380명으로 공시돼 있다”며 “의료계가 대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다시 한번 추계해볼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1천명이든 500명이든 대

안을 갖고 논의하려면 숫자 문제가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틀렸다면 (의료계가) 다른 방식의 해법을 가져와 두 개를 놓고 같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료 인력, 특히 의사 인력 수급 관리는 의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서도 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이나 밀려나 있는 분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여러 개혁이나 정상화를 제감할 수 있으므로 양극화 타개를 화두로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해왔던 정책 중 제감할 수 있는 정책에 더 집중해 속도와 성과를 내고 새롭게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가 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정치 꼴,尹대통령에 모든 책임”

법사위 의사진행발언 통해 예산 국회 방치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이 꼴로 가는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신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당시에도 여

소야대 정국이었다”며 “국회 예산 통과를 앞두고 김 대통령께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판에 저를 수차례 보내 예산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게 했고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고 청와대에 초청해서 예산안을 설명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예산 국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계시는가 묻고 싶다”며 “지금도 트럼프 국미 대통령 당선자와 만남을 위해서 골프 연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 국회를 방치하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검사들이 국회의 정당 탄핵소추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금 문제의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문제에 대한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집단적인 의사 표명을 해 봤느냐고 반문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채상병 국조 계획서’ 10일 본회의 추진

민주당 “주진우 특위서 빠져야”…朱 “난 무관”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부터 입장 차가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이 특위 위원으로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위원 중 주

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 바꿀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며 “저는 순직 해병 사관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 (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 (실내스크린골프 20개 구장)
- 골프채·골프용품 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